

남북협력동향

(2009. 9. 22 ~ 12. 15)

■ 북한 채권 가격 두달새 30% 급증(9.22,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채권의 거래를 대행하는 영국의 금융 중개회사 이그조틱스(Exotix Limited)는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북한채권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을 통해 밝힘.
- 이그조틱스사의 스튜어트 켈버하우스 수석 경제분석가는 현재 북한채권의 가격은 달러당 9센트로 지난 7월보다 2센트, 약 30% 올랐다고 전함.
- 2008년초 달러당 32센트까지 기록하던 북한채권은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북핵문제로 추락하기 시작해 2008년말에는 12센트로 떨어졌으며, 올해 4월에는 6센트라는 사상 최저가격을 기록한 바 있음.

■ FAO “북, 식량 180만톤 부족”(9.24, 연합뉴스)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올해 북한의 쌀과 옥수수 생산량이 예년보다 감소해 북한이 앞으로 170만톤에서 180만톤의 식량을 외부로부터 조달해야 할 것이라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전망했다고 보도함.
- FAO의 키산 군장 식량안보 분석관은 “올해 북한에 비도 적당히 오고 특별한 자연재해가 없는 등 농사짓기에 좋은 날씨를 보였지만 비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고 농기계가 낙후해 생산량은 좋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힘.

■ 성립정공, 개성공단 첫 ‘싱글 PPM 품질인증’ 획득(9.26, 동아일보)

- 대한상의와 중기청은 25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중 처음으로 성립정공에 ‘싱글 PPM 품질인증서’를 수여함.
- 대한상의 최규중 품질혁신팀장은 “이 인증을 딴 공장은 남쪽에서도 1,600여곳에 불과하다”며 “남측 기업들도 2, 3년 걸리는 일을 성립정공 북측 근로자 들이 1년여 만에 해냈다”고 높게 평가함.
- * 싱글PPM 인증서는 최근 6개월 동안 생산한 제품에서 불량품 비율이 100만개 가운데 10개(0.001%, 10PPM) 미만일 때 주어짐.

■ 개성공단 전력공급 누적 적자 5년간 182억원(9.28, 동아일보)

- 27일 한전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기현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개성공단 연도별 손실액 및 누적손실액’에 따르면, 개성공단 전력공급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가 18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 한전측은 “개성공단에 공급되는 전기에 국내기업에 적용하는 산업용 전력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북, 언론매체 통해 ‘그랜드 바겐’ 거부(9.30, 연합뉴스)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제안에 대해 ‘비핵·개방·3000’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며 “미국의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 철회가 없이 우리의 핵포기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허황한 꿈”이라고 일축함.
- 또한, “조선반도 핵문제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산물로서 철두철미 조미(북미)사이에 해결돼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대통령이 일괄타결안을 들고 나온것은 “조미 사이의 핵문제 해결에 끼어들어 방해”하려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주장함.

■ UNDP, 평양서 대북사업 재개(9.30,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07년 3월 이래 중단됐던 유엔개발계획 (UNDP)의 대북사업이 재개됐다고 보도함.
- UNDP 집행이사회는 지난 1월22일 정례회의에서 북한의 자금전용 의혹 때문에 2년반 가까이 중단돼온 대북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 UNDP는 1981년부터 북한에서 농경지 복구, 인적자원 개발, 경제개혁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음.

■ 北-中, 경제원조 교환문서 등 조인(10.5,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 정부는 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경제원조에 관한 교환문서' 등 다양한 협정과 합의문, 의정서, 양해문 등에 조인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이날 조인된 합의문엔 '경제원 교환문서'외에 '조약정리 의정서', '경제기술 협조협정', '교육기관간 교류협조 합의서', '소프트웨어 산업분야 교류.협조 양해문', '국가품질감독기관 사이의 수출입품 공동검사 의정서', '중국 관광단체의 조선관광 실현에 관한 양해문', '야생동물보호협조 강화 합의서' 등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음.

■ 중, 북한 나진항 부두 개발권 확보(10. 7, YTN)

-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을 통해 압록강 대교 건설을 성사시킨 중국이 북한 나진항 부두 개발권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남.
- 북한 나진항 1호 부두의 개발권을 따낸 기업은 중국 다롄의 환경설비 제조 전문업체인 창리그룹으로서, 1호 부두 전용권을 확보하는 대가로 중국 훈춘에서 나진항까지의 도로 93Km를 개설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북, 1980년대 말 최고실적 돌파 목표(10.7, 연합뉴스)

- 재일본 조총련 계열 조선대학교의 지영일 사회과학연구소장은 조선신보에 기고한 '〈지영일 교수의 월간 경제평론〉 150일 전투와 경제강국 건설 전망'이라는 글에서 북한이

2012년까지 “1980년대 말에 이룩한 최고 생산실적을 초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함.

- 지 소장은 “2012년의 생산목표를 현재 생산수준의 3배 이상으로 설정한 기업이 적지 않으며” 금속, 전력, 석탄공업, 철도운수 부문의 어떤 기업소에서는 6배를 내세운 곳도 있다고 말하고, “1980년대 말에 이룩한 최고 생산실적을 초과 달성하는 것을 강성대국 개문의 기본 징표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함.

■ 중, 북에 최소 4억 5천만 달러 무상지원(10.9, 한국경제)

- 중국이 북한에 3억달러 규모의 물자 등 최소 4억 5천만 달러를 무상지원키로 한 것으로 알려짐. 또, 북한과 공동으로 “비단도 개발위원회”를 구성, 압록강 하구의 비단도를 북한 경제개발의 거점으로 만드는 작업을 최대한 지원키로 함.
- 중국이 북한에 지원키로 한 3억 달러어치의 물자중 식량과 원유 및 각종 생필품은 2억 달러 규모이며, 나머지 1억 달러어치는 통신설비, 장비 등으로 지원해 주도록 북한측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개성공단 토지이용권 전매제한 폐지(10.9, 세계일보)

- 9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분양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월 1일부터 개성공단 분양권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권을 공장 건물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까지 제 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계약 규정을 폐지하였음을 설명함.
- 정부 관계자는 “토지이용권 전매 관련 경과기간 등 규제는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입주를 원하는 업체들이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주고 포기할 업체들은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한 때라고 판단해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함.

■ 북, 동해안서 단거리 미사일 5발 발사(10.13, 매일경제)

- 정부관계자는 “북한이 동해안에서 KN-02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모두 5발 발사했다”고 밝히고 “발사장소는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이남에서 강원도 원산시 사이의 동해

안 일대로 안다”며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발사됐기 때문에 발사장소를 특정할 수 없다”고 덧붙임.

■ 북, “임진강 인명피해 유감..... 유가족에 조의”(10.14, 경향신문)

- 북한은 14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 열린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에서 “임진강 사고로 남측에서 뜻하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유가족에 대해서도 심심한 조의를 표명한다”고 했다고 남측 수석대표인 김남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이 회담 브리핑을 통해 밝힘.
- 김국장은 북측의 유감표명에 대해 “전체적인 맥락과 그쪽의 설명을 봐서, 사과로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으며, “우리측은 임진강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 통보체계와 관련해 댐 명칭, 방류량, 방류 이유를 담은 양식을 전달했다”고 말함.

■ 북, 인도적 지원 공식 요청(10.17, 조선일보)

- 남북은 16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이산가족 상봉 확대와 인도적 대북지원 문제 등을 논의함.
- 우리측은 11월중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가족 교환상봉과 내년 설 금강산에서 상봉행사를 각각 개최하자고 제의했으며, 국군포로, 남북자 문제를 ‘특수 이산가족’ 범주에서 논의하지 말고 별도로 해결책을 모색하자고 촉구함.
- 북측은 우리측 제안에 명시적 입장을 밝히지 않은채 “남측의 성의가 있기를 바란다”며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함.
-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은 인도적 지원의 구체적인 품목이나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하며, “인도적 대북 지원은 한다는게 현정부의 일관된 원칙이지만 10만톤 이상의 식량을 주는 것은 인도적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전함.

■ 중, 북 접경지대 대대적 경제개발(10.27, 연합뉴스, 국민일보)

- 북한 접경지역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과 지린(吉林)성 통화(通化)가 ‘통단(通丹)

경제벨트' 구축에 합의 했다고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 신문망이 27일 보도함.

- 단둥은 중국 전체 대북무역의 60%를 차지하는 대북무역 중심지이며, 통화시 지안(集安)은 대북무역 4대항 중의 하나임.
- 또한, 지난달 1일에는 지린성 화룽(和龍)과 난핑(南平)을 잇는 철도 건설공사가 착공되었음. 중국철도부와 지린성 정부가 2011년 완공을 목표로 11억 9000만 위안을 투자, 건설에 나선 이 철도는 전체 노선이 41.68Km에 불과하지만 북한 무역 관문인 난핑과 중국 동북의 내륙 철도망과 연결된 허풍을 잇는 철도라는 점에서 주목됨.



■ 정부, 남북간 출입업무 개선.. 북에 군통신 장비 제공(10.28, 세계일보)

-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오늘(28일) 오전 광케이블과 통신관로를 실은 트럭 34대가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로 북한에 들어갔다”며 “다음달 중순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관련 기자재(총액 8억5000만원 상당)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힘.
- 이번 자재제공은 정부가 지난 19일 북측에 군 통신선로 개선공사를 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북측도 다음날 동의한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추진됨.

■ 정부, 송이·모래·무연탄 남북교역 제한(10.28, 경향신문)

- 통일부는 27일 ‘포괄승인’ 품목이었던 송이·모래·무연탄 등 3개 품목을 ‘개별승인’ 품목으로 변경하는 ‘남북 반출·반입 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공고했음.
- 포괄승인 품목은 세관신고만으로 반출입이 가능하지만, 개별승인 품목은 반출입시 매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모래 등 3개 품목이 개별승인 품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거래의 적절성 여부를 반출·입 당시 판단하게 되고 거래정보도 충분하게 확보돼 남북교역의 투명성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힘.

■ 북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무기화 성공”(11.3, 서울경제신문)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일 “폐연료봉 8,000개의 재처리를 지난 8월말 끝냈으며 추출된 플루토늄의 무기화에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함.
-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북한의 발표내용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에 따른 비핵화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에 역행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함.

■ 북핵 해결없이는 남북협력에도 한계(11.5, 동아일보)

- 이명박 대통령은 4일 “(그동안의 북핵 협상 관행으로는) 20년이 흘러도 북한은 달라질 게 없다. 그래서 핵 포기과 관련한 북한의 완전한 타결의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기조연설에서 밝힘.
- 이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폐기)협상을 오래 끌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다돼서 바뀌고, 한국 대통령도 바뀌고, 중국 주석도 바뀌고, 그러면 (김 위원장은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라며 북핵 일괄타결(그랜드바겐)의 필요성을 강조함.

■ UN 대북지원 국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11.6, 노컷뉴스)

- 유엔산하 인도조정국 존 냐가 공보담당관은 5일 “올들어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한 총 금액은 3천 730여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천 5백여만 달러에 비해 8백만 달러가 부족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서 언급함.
- 냐가 공보담당관은 “지원국가도 지난해에는 한국을 포함해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 14개 국가에 달했지만, 올해는 이의 절반인 7개국가에 불과해 올해 대북지원액의 절반이 유엔의 중앙긴급구조기금(CERF)을 통해 마련됐다”고 전함.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감소한 것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한 관심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북 신포경수로 청산논의 KEDO이사회 10일 개최(11.8, 세계일보)

-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8일 “미국 뉴욕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이 참가하는 KEDO 집행이사회가 10~11일 개최된다”면서 “한국전력이 소유권을 넘겨받은 경수로 기자재의 처리방안이 주요 의제”라고 밝힘.
- 그는 “35% 정도의 공정이 완료된 원자로를 포함, 신포 경수로를 위한 기자재에 들어간 금액만 설계비용을 제외하고도 약 7억 달러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이 문제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함.
- 신포경수로 사업은 1994년 북미간 제네바합의에 따라 100만kW급 경수로 2기를 북한에 제공하기로 하면서 1997년 8월 착공되었으나, 2002년 북핵문제가 불거지면서 종합공정률 34.5%상태로 공사 중단됨.

■ 북한, 해상분계선 고수를 위한 군사조치 위협(11.13, 연합뉴스)

- 북한은 13일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단장 명의로 우리 측에 통지문을 보내, 지난 10일 서해교전과 관련, “조선서해에는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지금 이 시각부터 그것을 지키기 위한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힘.
- 북측은 이번 교전이 남측의 도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남측은 이번 사건을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긴 데 대하여 민족 앞에서 사죄하라”고 말함.
- 이와 함께 북방한계선(NLL) 무효화에 대한 입장도 다시 한번 강조, “시대가 달라진 지금도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고수하려고 부질없는 군사적 모험에 매달리는 것은 파렴치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함.

■ 통일부, 개성공단 기업 특례지원 의결(11.16, 통일부)

- 정부는 제22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통해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특례지원”을 의결함.
- 정부는 “작년 하반기 이후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한 개성공단 입주업체 중 20개사를 선정하여, 총 60억원 한도 안에서 기업당 5억원 내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함.
- 또한 기존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기업 중 적자발생 기업 등에 대해서 대출원리금 상환을 6개월 유예하기로 함.

■ 유엔, 대북 인권결의 채택(11.20, 연합뉴스)

-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19일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찬성 96표, 반대 19표, 기권 65표로 가결됨.
- 이번 인권결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적인 중단 촉구, 탈북자에 대한 북한당국의 가혹한 처벌에 대한 우려표명, 탈북자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원칙존중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특히 이번 결의에는 아동에 대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침해에 대해 지속적인 보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고, 최근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하면서 탈북 난민과 관련해 난민협약과 선택의정서 당사국들에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감.
- 이날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인권결의는 다음 달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면 5년 연속 대북 인권결의를 채택하는 셈이 됨.

■ 북·중, 나진항 ‘국제 물류기지’ 합작개발(11.25,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이 나진항을 중계무역과 수출가공, 보세물류 등 국제 교역 단지로 합작 개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지린(吉林)성 발전연구센터 류시밍 거시경제처장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나진항을 단순한 동해 진출 항구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며, 나진항 중계무역 기지 개발 프로젝트는 이

미 북한은 물론 중국 중앙정부의 승인이 난 것"이라고 밝힘.

- 류 처장은 또한 "나진항을 중계무역 기지로 개조하기 위해 중국 접경지역인 북한의 원정에서 나진까지 폭 9m의 4차로 도로를 개설하고, 나진항 기존 부두의 보수·확장과 4번 부두 신축에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힘.

■ 북한, “남한 당국, 금강산관광 안 하려는 속셈”(11.25, 연합뉴스)

- 북한의 남북 경협 담당 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는 25일 금강산 관광 재개 논란과 관련, “통일부를 비롯한 남측 당국의 속셈은 금강산 관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함.
-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내고 “남조선 당국이 민간업자와의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 “금강산 관광사업은 처음부터 남조선 당국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태가 남측의 현대와 시작하고 오늘까지 이어온 사업”이라고 주장함.
- 대변인은 또한 남한 정부가 남북한 당국의 협의를 통해 관광객 신변안전이 보장되어야만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지난 8월 우리(북한) 최고 수뇌부의 특별지시에 따라 금강산 관광객들의 신변안전과 재발방지 문제에 대해 담보해줬다”고 주장함.

■ 조선신보, ‘북미간 최대 현안은 평화체제 수립’(12. 2, 연합뉴스)

- 조선신보는 2일 “북미 양자대화의 최대 현안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라며, “북미간의 평화보장체제 수립은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의 출발점”이라고 말함.
- 특히 ‘대청해전’을 거론하면서, “북남간의 무장충돌은 조선반도의 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재확인하게 했다”며, “우발적인 충돌의 우려가 있는 한 조선측이 자위적 억제력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함.

■ 북한, 화폐개혁 공식 확인(12. 4, 연합뉴스)

- 대외적으로 북한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지난달 30일부터 조선(북한)에서 화폐교환 사업이 시작되어 6일까지 진행된다.”고 4일 밝힘.
- 북한 중앙은행의 조성현 책임부원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신구권 화폐의 교환비율은 100:1이지만, 은행에 저축되어 있는 돈은 10:1로 바뀐다”며, 앞으로도 개인들의 저금을 장려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번 화폐개혁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만연한 ‘시장경제적 요소’를 일거에 정리하고 계획경제적 기강을 다시 세우겠다는 뜻으로 요약됨.
- 조성현 책임부원은 “지난시기 국가가 기업소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계획한 만큼 보장해주지 못해 일부 시장의 이용을 허용했다”며, “국가의 능력이 강화됨에 따라 보조적 공간의 기능을 수행하던 시장의 역할이 점차 약화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이번 화폐교환 조치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유통되는 화폐량을 줄이고 화폐의 가치를 높이자는 데 있다”며, “향후 상품 가격은 나라가 가격조정 조치를 취한 2002년 7월 수준이 될 것인데, 당시에는 쌀의 국제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상품가격을 설정했다”고 말함.
- 또한 “이번 조치는 노동보수를 받는 근로자를 우대하는 것”이라며, 사적 경제영역에서 활동하는 상인 등에게 ‘반사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강조함.
- 그는 또한 북한사회에 만연한 외화 사용에 대해 “앞으로 상점, 식당 등에서 외화로 주고 받는 일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외국인이나 해외동포들이 가는 상점, 식당에서도 화폐교환소에서 외화를 조선돈으로 교환해 쓰게 되어 있다”고 덧붙임.
- ※ 새로 발행된 북한 지폐는 5천원, 2천원, 1천원, 500원, 200원, 100원, 50원, 10원, 5원 9 종류이고, 주화는 1원, 50전, 10전, 5전, 1전 5종류임.

■ 타미플루 50만명분 북한에 제공(12. 10, 연합뉴스)

- 북한은 10일 우리 정부의 신종플루 치료제 지원 의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타미플루 등 신종플루 치료제 50만명분을 북한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힘.
-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에 대해 타미플루 40만명 분과 리렌자 10만명 분, 그리고 10억원 상당의 손 세정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라며, 약 178억원 정도의 협력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의결 준비 중이라고 밝힘.

■ 남북, 해외공단 합동시찰 착수(12. 12, 연합뉴스)

- 남북한은 12일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해외공단 합동시찰을 시작함.
-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남북 시찰단은 12일 베이징에서 만나 13~14일 칭다오, 14~16일 수저우, 17~18일 선전 공단을 방문한 뒤 19~22일까지 베트남 엔퐁 공단을 시찰할 예정”이라고 밝힘.
- 부대변인은 이어 “남북 시찰단은 성공적으로 운영중인 해외 공단의 투자환경과 공단 운영시스템, 출입, 체류, 노무 관리 등 각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함.
- 이번 공동 시찰의 남측 단장은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 대표, 북측 단장은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으로, 지난 6~7월 세차례 열렸던 개성공단 실무회담의 남북한 수석대표임.

■ 보즈워스, “북·미 6자회담 재개 공감”(12. 12, 연합뉴스)

- 2박 3일간(8일~10일) 일정으로 북한 방문을 마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번 방문이 매우 유용하였다”고 밝힘.
- 그는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만나 매우 실무적이고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며, “6자회담의 중요성과 필요성 및 9.19 공동성명의 합의 이행을 재개하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함.

- 그러나 “6자회담을 언제 어떻게 재개할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며, 더 기다려 봐야 한다”고 밝힘.
- 북·미 양자간 추가 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대화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하는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고 말함.
- 또한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쌍방은 평화협정 체결과 관계 정상화, 경제 및 에너지 협조, 조선반도 비핵화 등 광범위한 문제들을 장시간에 걸쳐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 “이를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만 간단히 언급함.

■ 북한, 화폐개혁 후 국정가격 공시(12. 13, 연합뉴스)

- 북한은 9일 최근 화폐개혁에 따라 새롭게 책정한 국정가격을 공시했다고, 대북인권단체 ‘좋은 벗들’이 13일 전함.
- 쌀의 공시가격은 kg당 23원으로, 화폐 개혁전 시장가격인 2천원대에서 100대 1(구권대 신권 교환비율) 정도로 끌어내린 것으로 보임.
- 현재 북한 주요 도시의 시장가격을 보면 대부분의 품목이 공시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실정이며, 지난 11일 함경북도 청진시 시장에서는 쌀 1kg에 50원 등 공시가격보다 2배 이상 비싸게 거래됐다고 전함.